

1

Jan 2018
No.6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신년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서명교

이슈진단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과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성

연구원소식

「2018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건설산업의 미래” 세미나 개최

발간물안내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설정책리뷰 발간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서 명 교

새해 황금 개의 기운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건설업 전반에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한해 전문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연구원로서는 전문건설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미나 등 여러 대외행사를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법제화 방안,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학교시설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등 40여건의 연구를 통해 전문건설의 업역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업계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건설업 권익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추어 혁신성장, 공정시장, 좋은 일자리 등 건설정책의 3대 핵심 가치와 함께 수요창출 프로젝트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곧 지난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도 협회와 조합의 협조를 얻어 처음으로 연구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기전망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베트남과 MOU를 맺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신년사

올해는 건설경기가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경기를 견인하던 주택시장은 규제강화로 하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SOC 예산도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4%나 감소했으며, 해외건설도 유가전망이 불투명하여 금년에도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닙니다. 국내수주는 지난 3년 동안 150조원을 상회하였으나, 올해는 138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신규수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2-3년을 내다보면서 내실을 다지는 경영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건설공사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거래를 억제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업계 고충을 완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전문건설업계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장기 관점의 연구도 계속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원의 성과가 체감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 만큼, 금년에는 한분 한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는 연구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무술년 새해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즐거운 설 명절 맞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 동안 영업이익률 등 경영 실적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단계가 낮아질수록 상생협력 가치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 의식이 낮은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건설분야 주요 법 위반 유형을 보면 대금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이 80.5%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대책은 ①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②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 ③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의 3가지 추진방향 아래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전속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제조 및 용역 분야에서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은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뿐

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하여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깎는 관행을 막고자 하고 있다. 만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하면 하도급 금액도 조정해야 한다.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금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간섭행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고, 공정거래협약 및 모범사례를 수평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더욱 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 설치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얻은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 분배될 수밖에 없는 힘의 불균형 구조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에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건설 산업에 공정거래가 무사히 자리 잡아, 모두가 웃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설 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과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성

최 별 하 연구원(cbh729@ricon.re.kr)

“안전구호 준비!..... 좋아! 좋아! 좋아!” 이른 아침 현장 안전 조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이런 무재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단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치부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 9일에는 인천 중구(1명 사망)와 용인(3명 사망, 4명 부상)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추가 2건을 포함하여 12월에만 타워크레인 사고가 4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5월, 10월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11월에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재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정부의 대책 또한 사고 원인을 발본색원하기보다 본질의 변죽을 두드리는 듯한 측면이 있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지난 노후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한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장비의 노후화와 해이한 안전관리의 식을 꼽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는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이를 통한 브랜드가치 손실과 별도로 진행되는 손해배상 등 손해는 상당하다. 때문에 건설사를 비롯한 근로자가 안전 관련 업무를 해태할 이유는 적어 보인다.

다른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된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역시 핵심 농친, 반쪽짜리 대책이다. 정부는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이라는 크레인의 사용연한만을 규제하려 하고 있지 왜 20년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생략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발주처-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수직구조와 나날이 심화는 경쟁을 통해 저가 수주가 만연해 있다. 정부의 SOC 투자감소와 각종 규제에 의한 주택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비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기계 사용연한제한 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만, 적절한 노후기계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장비 교체를 유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적정공사비 확보이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면 노후기계를 교체함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2018년을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점검과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안전과 비용은 비례한다.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어야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안전대책과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뤄져 2018년에는 국민과 건설인 모두가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건설산업의 미래”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오는 2월 22일(목),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전시회에 참가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건설산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22일(목) 14시, 제1전시장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우리 연구원은 본 세미나 개최를 통해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선도적 기업 사례를 통해 업계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중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Korea Construction Tech Expo

2018. 2. 22(목) ▶ 24(토) 일산 KINTEX

동시 개최 2018경향아우징페어

| 행사개요 | |
|-------------|--|
| 전시회명 | [국립] 대한민국건설기술산업대전 [행정] Korea Construction Tech Expo [약칭] KCONTEX |
| 전시기간 | 2017. 02. 22(목) - 24(토) / 3일간 |
| 전시장소 | 일산 KINTEX 제1전시장, 3층 그랜드홀 |
| 주 최 | 이상네트웍스 |
| 동시개최 | 2018 경향아우징페어 [Korea Build] 2018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Hvac Korea] |
| 전시품목 | * 건설기술산업 전 분야 |
| 기술 | 도로, 철도, 항만 및 해안 공·역수도, 수자원, 교량, 터널, 토질 및 기초, 측량, 해저, 가설, 철근콘크리트, 목공 보수보강 등 |
| 장비 | 프린트, 레이저, 도포, 포장, 콘크리트, 유지보수, 물렌트, 특수장비, 아태리프트 & 부용, 축장·계측, 기타 장비 |
| 자재 | 구조재료, 철강, 비철재료, 도로, 방수, 보온 단열재, 가설재, 부품·금속, 시멘트(합기) 등 |
| 시스템 | 각종 핵심 및 설계 프로그램, BIM, 3D모형링, 건설정보관리, 자동화, 통신, 제어/통신 등 |

참가문의 Tel. 02-3397-0138 Site. www.kconte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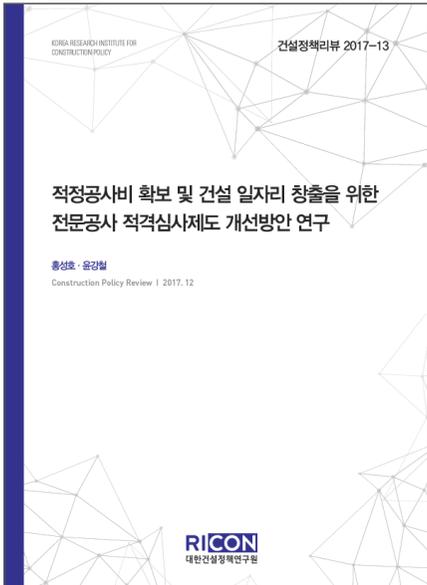
이상네트웍스

이번 세미나에서는 1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건설산업의 추진전략(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주제인 건설장비 자동화(영신디엔씨), 제3주제인 드론 공간정보의 건설분야 활용 방안(공간정보)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김태항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정욱 이화여대 교수,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박종문 (주)한국강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8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은 ‘건설기술산업’ 전문 전시회로 건설 및 건축산업 전반에 걸친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건설산업현황과 최신기술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홈페이지: www.kcontex.com 참조)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설정책리뷰 발간



우리 연구원은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문 적격심사 공사 낙찰하한률 상향의 필요성과 그 수준, 공사수행능력평가의 건설고용 심사항목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 상향의 필요성과 그 수준을 제시하였다. 108건 공공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내역서를 분석하여 표준품셈 현실화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은 전문 원도급 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2%가 아닌 92%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여력을 갖도록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큰 틀(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배점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만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경우 50~3억 원 전문공사 낙찰하한률은 종전의 86.745%에서 90.745%, 그 미만 공사도 87.745%에서 91.745%로 4%p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여력이 실제 건설 근로자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의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 중 하나로 건설인력 고용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배점의 1/10 수준인 1점(3억 원 미만)~3점(50~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본 점수 항목 또는 감점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은 임시직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직·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이 4%p 상향될 경우 2,913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나,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1,621명의 건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